

감사결과

1. 총괄

감사결과 [표 1]과 같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5] 감사결과 현황

(단위: 건)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시정
건수	금액 (원)	인원										계	일반	시정 완료 (금액)	인사 자료 (인원)	비위 (인원)	모범	
13						9				1		3	3					

가. 유지보수 실태

1) 함정수리를 위한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판단기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관서 지출관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점) 각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는 신속한 함정정비를 위해 500만원 미만의 소액수리에 대해서는 소속관서 계약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자체 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통해 직접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울진해경서 등 7개 관서의 함정수리 담당부서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이 [별표 1] “함정 수리 관련 관서별 관서운영경비 분할집행 사례”와 같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동일한 업체를 대상으로 5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부당집행

[표 3] 합정 수리 관련 관서별 관서운영경비 분할집행 사례

(금액단위: 원)

소속지방청	경찰서	대상합정	건수	금 액	비고
	계		31	111,808,400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S-○○정	5	12,610,400	'22년
	동해해양경찰서	○○○○합	2	8,840,000	'20년
		○○○○합	2	8,500,000	'22년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부안해양경찰서	RES-○○정	2	6,383,000	'22년
	여수해양경찰서	방제○호정	4	13,409,000	'19년(2건), '20년(2건)
		○○○합	2	9,812,000	'21년
	완도해양경찰서	P-○○정	2	7,884,800	'19년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	○○○○합	2	8,639,000	'21년
		○○○정	2	5,541,000	'21년
	제주해양경찰서	○○○합	2	5,216,000	'21년
		○○○○합	2	5,818,000	'21년
충부지방 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합	2	9,769,000	'22년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구조정	2	9,386,200	'21년

자료: 각 지방청 및 해경서 제출자료 재구성

주요 사례

- 동해해경서 ○○○○합의 경우 동일한 냉동기를 어류와 육류로 구분하여 분할 발주, 동일한 좌현 축 베어링 복구와 교체수리를 분할 발주하는 등 일괄 발주시 관서운영 경비 지급한도금액이 초과됨을 예상하여 부당집행
- 특히 울진해경서(□□파출소 S-○○정)의 경우 기존 사용중인 발전기의 문제로 수리 완료('22. 8. 3., 수리금액 1,976,700원)후 약 한달여 만에 동일한 업체를 통해 해당 발전기를 신품(구입금액 4,111,800원)으로 교체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교체 대상 장비를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 완료 후 교체

《관서운영경비 자체감사 지적 사례》

- 구조장비 구매관련 예산집행방식 개선 필요 ('20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종합감사 : 권고)
 - 일괄집행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지역구조대별 분할 집행
- 실습함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개선 ('21년 본청 주관 해양경찰교육원 특별감사 : 권고)
 - 동일 일자·시간대 합정 주·부식 구입비 500만 원 미만으로 수회 분할하여 집행
- 연안구조정 유류비 사용 부적정 ('21년 남해지방청 주관 울산해경서 특정감사 : 기관주의)
 - 파출소 연안구조정 유류구입시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 항공기 비행관리시스템 유지비용 지급방식 개선 ('22년 본청 주관 동해지방청 종합감사 : 통보)
 -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액(50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금액 초과' 감사원 타기관 동일 지적 사례》

- '18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농진청 기관운영감사(주의), 해양수산부, 교육부 재무감사 (주의)
- '19년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 재무감사(주의), 새만금개발청 결산감사(주의)
- '20년 외교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주의)
- '22년 소방청, 관세청 국가결산감사(주의), 대법원, 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 정기감사(주의)

- ▶ (조치사항) 울진해양경찰서장 등 7개 기관장¹⁾은 함정수리 등을 위한 관서 운영경비 집행 시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기관경고)

2) 수의계약 관행개선 미흡 [기관경고]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9조 등에 따르면 함정정비는 해양경찰정비창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르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예정가격 이상 최저 견적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이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간 소속 중앙관서와 계약체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그리고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대해 상기의 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1) 울진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부안해양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장, 완도해양경찰서장,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장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도록 규정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문 제 점)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정비를 위해 입찰한 함정을 대상으로 정비를 위한 각종 수리용 자재를 구입하면서

- 2018회계연도 국회결산 및 2020년도 본청 주관 해양경찰정비창 기관운영 감사에서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으로 지적 받아 함정 정비에 소요되는 각종 수리자재의 수급관리를 개선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도록 지적 받았음에도 5백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감소한 반면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증가하는 등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

[표 4] 해양경찰정비창 연도별 계약현황

2022. 10. 31. 기준

년도	구분	총계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소계	2천만원~5백만원	5백만원 이하
총계	건수	10,844	830	10,014	2,322	7,692
	금액	1,768억원	1,318억원	450억원	247억원	203억원
2018년	건수	2,585	132	2,453	314	2,139
	금액	318억원	219억원	99억원	36억원	63억원
2019년	건수	2,386	108	2,278	203	2,075
	금액	304억원	223억원	81억원	22억원	59억원
2020년	건수	2,018	152	1,866	465	1,401
	금액	352억원	269억원	83억원	48억원	35억원
2021년	건수	2,074	257	1,817	691	1,126
	금액	407억원	308억원	99억원	73억원	26억원
2022년 (10월 까지)	건수	1,781	181	1,600	649	951
	금액	387억원	299억원	88억원	68억원	20억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해양경찰정비창 계약현황 자료 추출

※ '21. 9. 16.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을 개정하여 정비창장의 예산집행 결재권을 기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개정 전 정비창장의 결재(5백만원 이상)에 대한 부담으로 분할 결재 상신 관행

- 또한 지출관이 지출한 5백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의 경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건당 5백만 원 미만으로 소속 지출관을 경유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직접 집행한 내역은 오히려 증가

[표 5] 해양경찰정비창 연도별 관서운영경비(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집행 현황

2022. 10. 31. 기준

(금액단위: 백만 원)

년도	계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재료비 (210-11목)	비고
총계	410	379	32	
2018년	60	57	3	
2019년	34	29	5	
2020년	37	34	3	
2021년	168	162	7	'20년 대비 454% 증가
2022년 (10월 까지)	111	97	14	'20년 대비 300% 증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해양경찰정비창 관서운영경비 추출자료 재구성, 함정정비(단위사업 4231) 기준

《주요 지적 사례》

✎ 과다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 필요 (주의)

※ '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예비검토

- 해양경찰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수 장비 및 자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각종 전기통신 자재 구매비로 특정 업체와 총66회에 걸쳐 2억 3,371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지급하는 등 5개 업체와 거래하였음
- 해양경찰청은 동 사업의 장비 및 자재 구입 시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고 계약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분할 수의계약 등 함정 수리물품 계약업무 부적정 (경고·주의)

※ '20년도 해양경찰정비창 기관운영 종합감사

- 일괄 발주시 예산절감이 예상되는데도 동일한 사업을 수개로 분할 발주 및 일부 단일업체와 수의 계약 체결

➤ (조치사항) 해양경찰정비창장은 국회 및 감사기구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예산집행업무 철저 (기관경고)

나. 하자보수 실태

1) 함정 외주수리계약 하자관리 부적정 **(통보)**

-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 뿐만 아니라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 등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문 제 점) 해양경찰정비창은 입찰 함정을 대상으로 각종 정비를 이행 중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외주전문업체를 통해 해결

[표 8] 연도별 해양경찰정비창 외주수리 집행현황

연도별	계획정비 예산액	외주수리 집행		
		함정	금액	비율
2018년	283억 원	128척	138억 원	49%
2019년	283억 원	117척	156억 원	55%
2020년	340억 원	139척	177억 원	52%
2021년	394억 원	128척	169억 원	43%
2022년 (10월)	406억 원	106척	153억 원	38%

자료: 해양경찰정비창 최근 5년 간 함정 외주수리내역 제출자료 재구성

- 정비창 자체수리 불가 사유로 전문업체 외주수리 과정에서 계약체결시 하자보증담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조치 미흡

※ 해양경찰정비창은 하자발생 함정이 해양경찰정비창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외주수리업체와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하자관리를 관행적으로 처리

주요 사례

-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함은 해군정비창 입창 수리기간 중 우현 추진축 O/D BOX 외주수리과정에 동일내용으로 같은 기간 총 3회의 수리를 실시, 해당 함정이 소속 관서로 복귀 후 동일사안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내에 고장원인 및 하자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출동지연에 따른 경비공백을 사유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 실시 (하자책임 구분 모호)

〈부산 ○○○○함 O/D BOX 외주(중복)수리 현황〉

구분	수리기간	수리내용	계약업체	계약금액	발주기관
1차	'21. 11. 10. ~ 12. 20.	○○○○함 우현 추진축 O/D BOX 수리	◇◇◇	43,550,000원	해경정비창
2차	'21. 12. 6. ~ 12. 15.	○○○○함 O/D BOX 손상부 추가수리		8,500,000원	
3차	'21. 12. 27. ~ 12. 29.	○○○○함 우현 추진축 PTO PUMP 수리		5,030,000원	
4차	'22. 2. 14. ~ 3. 11.	○○○○함 O/D BOX 불량부속 교체 및 복구수리		13,420,000원	부산해경서

- 계약관계 법령에 따르면 하자관리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하자검사 가능함에도 함정 외주 수리에 대한 하자관리실적 전무

※ 입창 함정 외주수리 계약관서(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경리계, 기술품질과)와 함정 운용관서(각 해양경찰서)의 이원화로 하자관리주체에 대해 불분명

-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함정 하자수리에 대한 업무는 기술품질과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는 외주수리를 제외한 자체 수리에 대해서만 하자관리를 실시 주장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제7조(기술품질과) ③ 품질관리계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재수리 및 하자수리에 대한 문제점 분석

-이하생략-

- ▶ (조치사항)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입창 함정이 외주수리를 종료하고 소속 관서로 복귀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통보)

2) 항공기 신규도입 이후 하자관리 부적정 (통보)

-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는 약정된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무는 종료함
- 따라서 약정된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시기 도래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증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문 제 점) 해양에서의 신속한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 매년 신규 항공기를 도입을 위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항공기제작사와 일정기간(2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선도래)²⁾ 하자발생시 하자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 최종 인수 이후 하자발생시 하자수리를 요청









[표 9] 해양경찰 항공기 보유 및 배치현황

2022. 10. 31. 기준

(단위: 대)

구 분	계	동해청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	중부청	
		양양	포항	목포	군산	여수	무안	부산	제주	김포	인천
계	24	3	2	2	2	2	3	1	3	3	3
비행기	6	-	-	-	-	-	3	-	-	3	-
헬 기	18	3	2	2	2	2	-	1	3	-	3

2) 2022년 항공기 도입분 부터 하자보증책임기간을 기존 2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선도래에서 3년 또는 비행시간 1,500시간 선도래 조건으로 변경

챌린저 (444억)	C-212 (115억)	CN-235 (278억)	S-92 (490억)	AW-139 (200억)	현수리 (241억)	팬더 (130억)	카모프 (49억)
							

자료: 해양치안빅데이터팀 2022년 10월 주요통계자료 재구성

- 그런데 장비기술국(장비기획과)은 항공기 신규 도입·배치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항공기제작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하자수리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하자수리에 대해 당초에 약정된 하자보증책임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보증기간을 재연장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
-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 하자조치완료일로부터 재차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하자보수책임기간 설정 취지를 위배하여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연장 행위로써 불공정 사례에 해당

주요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 7. 9.)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하자보수기간의 일방적 연장 행위"
- 국민신문고(조달청 계약법규질의회시)공개번호 165790(2017.04.10.)
 - 질의요지 :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처리 완료이후 하자보증기간 산정
 - 답변내용 : 하자보증책임기간내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해당기간내 하자발생 및 이에 따른 하자보수 시점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님

[표 10] 해양경찰 최근3년 항공기 도입 및 하자보증 현황

(단위: 대)

기종	제작사	도입연도	하자보증책임기간
현수리(○○○호)	○○(▲▲▲)	2019. 12월	2019. 12. 24. ~ 2021. 12. 24.
현수리(◆◆◆호)			
현수리(■□■호)		2021. 4월	2021. 4. 26. ~ 2023. 4. 26

[표 11] 해양경찰 항공기 하자보증기간 초과 하자수리 현황

연번	소속	기종	호기	하자수리 내용	수리일자	조치내용
1	제주청	흰수리	B●●●●	메인로터 블레이드 침식보호대 균열	‘22. 3. 2 ~ ‘22. 3. 4.	수리/부품교환
2				ISI(예비계기) 시현 불량	‘22. 10. 24	교환
3				탐조등 내부 금속 튜브 부식	‘22. 11월 중	부품교환
4	동해청		B●●●●	축압기 압력누유 신품교환	‘22. 4. 29.	부품교환
5				엔진 팽창시일 교환	‘22. 6. 11.	부품교환
6				테일 기어박스 인풋 셀(SEAL) 오일 누유	‘21. 12. 28. ~ ‘21. 12. 30.	부품교환
7				OCS(Oil Cooling System) 출력축 셀(SEAL) 오일 누유	‘21.12. 28. ~ ‘21.12. 30.	부품교환
8				주 기어박스 오일필터 조립체 교환	‘22. 7. 13 ~ ‘21. 07. 15.	부품교환

자료: 각 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제출자료 재구성

- ▶ (조치사항) 장비기술국장(장비기획과장)은 하자보증책임기간내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특수조건 등은 재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 (통보)

다. 불용처분 실태

1) 보급창고 물류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부적정 (기관경고)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 규칙」 제42조 등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 스스로 개선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한편 「물품관리법」 제34조 등에 따르면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해양경찰정비창은 매년 계획된 경비합정의 정기수리 및 긴급 사유로 인한 응급수리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합정 수리용 자재를 구매하여 보급창고 등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음

[표 12] 최근 5년간 해양경찰정비창 ‘합정정비’사업 예산편성 현황

(금액단위: 억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년도별 예산편성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231 합정정비	계	303	299	370	423	438
	301 합정계획정비	283	283	340	394	406
	303 정비창관리	20	16	30	29	32

자료: 해양경찰정비창 최근 5년간 예산편성내역 재구성

- (문 제 점) 해양경찰정비창은 '13년도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의 보급창고를 신축³⁾하는 과정에서 같은해 기존의 노후된 물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수리부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하여 독자적인 물류전산시스템을 구축

3) [해양경찰정비창 보급창고] 발주기관 : 해양경찰정비창, 설계기간 : 2012. 11. 8. ~ 2012. 12. 27., 설계금액 : 83백만 원, 공사기간 : 2013. 5. 6. ~ 2013. 12. 1. 준공일자 : 2013. 12. 13. 공사금액 : 18억 원(건축,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건축현황] SRC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 220평(지상2층, 폭 17m× 길이 42.6m), 연 면 적 : 440평, 샌드위치 판넬 외벽마감, 절전형 LED 등기구, 크레인 2대, 승강기 1대

[그림 3] 해양경찰정비창 보급창고 물류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보급창고 물류관리시스템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 : 해양경찰정비창, ▪ 계약기간 : '13. 6. 24. ~ '13. 12. 26. ▪ 계약금액 : 253,374,000원, ▪ 계 약 자 : ■■■■(주) ※ 시스템 구성 :기초정보관리, 입·출고 정보관리, 재고 정보관리, 전자현황판 구축, 바코드 기반 화물 관리기능, 물품검수(검사)기능, 해양경찰 통합시스템 연계, 기타 입출고 빈도 조회, 보관위치 조정관리 등

- 또한 장비기술국(장비관리과)은 기존 시스템 노후('99년 구축)와 함정 중요 장비인 엔진, 발전기 등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및 유류, 차량, 무기 등 각종 장비 증가에 따른 새로운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에 따라 물품관리 기능이 포함된 통합장비관리시스템⁴⁾을 '12년도 구축완료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사용 중에 있음
- 한편 해양경찰정비창은 '20년도 본청 주관 기관운영종합감사에서 보유중인 수리자재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유로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수리자재 관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감사처분(기관경고)을 받음

※ 해양경찰정비창은 '20년도에 감사처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비창 수리자재 관리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비기술국이 서부정비창 신설 관련 「IoT 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개발 사업*(이하 "통합관제 플랫폼"이라 한다)」에 수리부속 관리 기능을 반영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 추진중임을 확인, 현 시점에 별도의 수리자재 관리 사업 추진시 예산 낭비 우려로 자체 중단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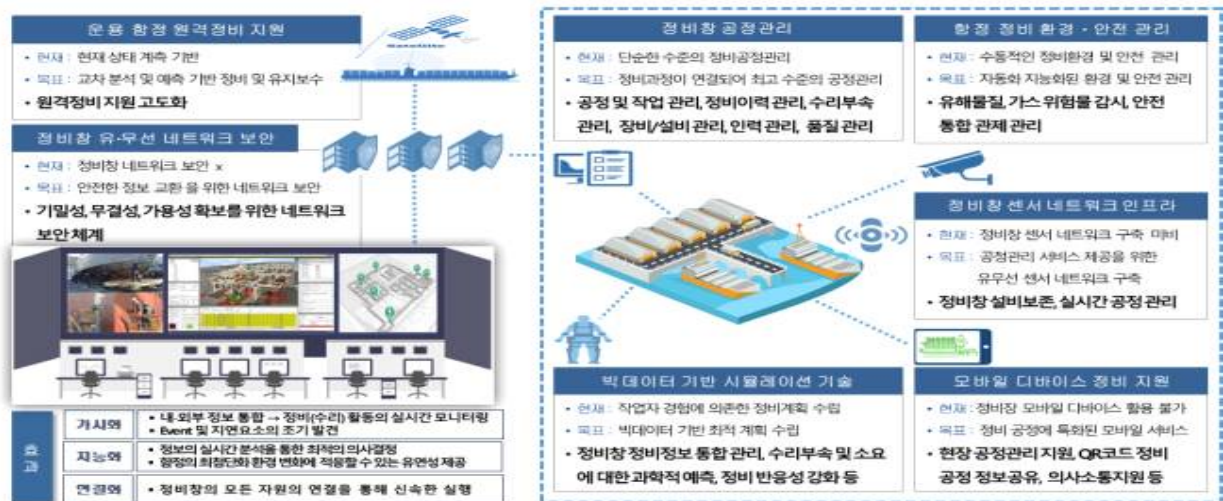
- 그리고 장비기술국이 신규 추진중인 '통합관제 플랫폼'사업은 실증절차 등을 거쳐 2025년도 최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정기간 장기 소요 및 부처간 협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기한내 준공 여부를 장담

4) 통합장비관리시스템(약칭 : 장비나라 시스템) 최초 통합장비·수리관리시스템에서 명칭변경
발주기관 :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비관리과), 사업기간 : 2011. 8. 26. ~2012. 11. 17.(15개월), 총 2년차 사업, 총사업비 : 23억 원, 사업자 : (주)▲▲, (주)■■■■ 공동계약, 사업내용 : 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 22개 기능 583개 업무개발

할 수 없음

- 따라서 해양경찰정비창은 ‘통합관제 플랫폼’사업이 완공되기까지 현재 수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보유중인 수리자재(주·보기 등 총178종 3,586품목 145,295점, 2022. 11월 기준)와 앞으로 신규 구매할 수리자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IoT 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개발 사업



- 추진근거 : '21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선정(○○부, 해양경찰청, ●●●●●부)
- 사업기간 : '21년 ~ '25년(5년차 사업), 기술개발 후 정비창 실증화
- 사업예산 : 230억 원(○○부 110억 원, 해경 75억 원, ●●부 45억 원)

- 그런데 해양경찰정비창은 금번 실지 감사기간(2022. 10. 17. ~ 12. 16.) 정비창 보급창고의 수리자재 관리실태를 직접 확인결과 전체 보유량 대비 약 10%(748품목 14,802점)에 대해서만 재고 위치를 파악하여 현행화하고 있는 등 '20년도 자체 감사 지적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보유중인 수리자재에 대한 재고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효율적인 수리물품 재고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정비창이 2013년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정비창 보급창고 물류관리시스템」의 경우 장비기술국(장비관리과)이 2012년도 구축한 「통합장비관리시스템」과 연동

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초 구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 및 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

[그림 4] 보급창고 내 물류 전산처리시스템



자료: 정비창 보급창고 내 시스템 부속 장비 현장 사진

▶ (조치사항) 해양경찰정비창장은

- ① 물류전산처리시스템의 활용 가능여부를 재검토하고 추진중인 통합관제 플랫폼의 사업기간 등을 고려 자체 수리자재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 ②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 사장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기관경고)

3) 폐축전지 불용처리 부적정 (통보)

- (판단기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소관의 관제시설을 정기·수시 점검하는 등 각종 비상상황 대비 관제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며 해양경찰청은 2022년 기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 센터(VTS)를 운영하고 있음

[표 13] 선박교통관제시설(VTS) 구분

구 분	비 고
필수시설(4종)	①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②레이더, ③선박자동식별장치, ④초단파 무선전화
보조시설(3종)	①무선전송시스템, ②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③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그 밖의 관제시설	필수·보조시설 이외의 시설

자료: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재구성

-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제35조와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 등에 따르면 불용결정된 물품은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매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그 수익금은 국고에 납입하고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문 제 점) 선박교통관제시설은 전력을 사용·운용되는 장비로 예견치 못한 정전 등의 사고에 대비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등을 사용, 무정전전원장치는 장비 사양에 따라 정해진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하기에 일정 기간 사용시 축전지의 수명에 따라 신규 제품으로 교체 필요

[표 14] 산업용 무정전전원장치용 축전지 비교

구 분	무보수 밀폐형 (MF TYPE)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ES&ESP TYPE)
평균 수명	3~5년	5~7년
설치방식	수평	수평/수직
폭발 위험성	사용연한 경과/고온에서 폭발 위험	안전밸브가 있어 과충전시에도 폭발위험 없음
가격대비	저렴	고가

자료: (주)♣♣전기 홈페이지 “산업용(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의 종류와 차이점” 내역 재구성

- 그런데 일부 지방해양경찰청(관제센터)은 관리중인 관제시설 무정전장치의 축전지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노후 폐축전지를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국고 수익처리하지 않고 매년 관행적으로 일반 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아래 [표 15]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 감사기간 현재까지 약 1천8백만 원 상당의 국고 수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표 15] 해상교통관제센터 폐축전기 부적정 매각 처리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관서명	관제센터명	규격 및 수량	매각금액	교체년도	처리결과
계 (총 462점)			18,648,680		
남해청	통영연안VTS	12V-120AH(ESP타입) 등 2종 70점	2,001,520	2018	납품업체 수거
	부산신항VTS	RP 12V-60AH 등 1종 30점	487,680	2019	폐기물 처리
동해청	포항항VTS	12V-200AH(ESP타입) 등 3종 131점	6,070,600	2018 ~ 2022	폐기물 처리
	동해항VTS	12V-100AH(ESP타입) 1종 30점	762,000	2021	폐기물 처리
제주청	제주항VTS	12V-150AH(MF타입) 등 3종 79점	3,515,360	2018 ~ 2021	폐기물 처리
중부청	인천항VTS	12V-150AH(RP타입) 등 2종 74점	4,104,640	2019	납품업체 수거
	대산항VTS	12V-120AH(MF타입) 등 2종 48점	1,706,880	2022	납품업체 수거

자료: 각 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현황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 5] 해상교통관제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실태



- ▶ (조치사항) 경비국장(해상교통관제과장)은 재활용 가능한 폐축전지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 (통보)

3) 경비함정 운항정지(매각대상) 물품처분 개선 필요 **(개선)**

- (판단기준)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2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운항정지된 함정은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심의위원회” 및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체, 의장품, 기타 보유 물품 등에 대해 상태를 확인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활용 가능한 물품은 예비품으로 보관 또는 관리전환 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다.

[표 16]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에 따른 심의위원회 종류와 기능

구 분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심의위원회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
임 무	가.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 상태분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운항정지 된 함정을 사용승인, 관리전환, 사용허가, 매각할 경우에 무기 및 보안장비의 해체(회수)에 관한 사항 다. 유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관 업무 (해경서)	1. 기획운영과장 : 선체, 의장품 등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비관리과장 : 물품분류, 유류처리, 무기 및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운항정지 된 함정의 장 : 재활용 또는 처분예상 품목에 관한 사항	

자료: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5조 재구성

- (문 제 점) 최근 5년간 운항정지 함정(총20척) 대상 물품 등에 대한 처분 현황을 확인 결과 비소모성물품 등에 대한 처분은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 기기부속의 경우 일부함정(2020년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2척)을 제외한 나머지 함정 18척은 처분대상 세부목록 부재, 장비나라 재고 불일치, 행정절차 없이 임의 반납 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 소모성 물품 중 유류의 경우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에 따라 세부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페인트를 포함한 기타 함수품 등의 세부처리 기준이 부재하여 반납 등의 행정절차 없이 임의 처리하고 있는 실정

[표 17] 운항정지 함정 기기부속 및 소모품 처리 현황

처리구분(총 20척)	내 용
무상양여(2척)	제주(○○○함, ○○○함)
임의처리 (12척)	부산(○○○○함, P-○○○정), 울산(P-○○○), 부안(○○○정), 동해(P-○○○), 속초(P-○○○, 방제○○호), 포항(P-○○○, 방제○호, ○○○함, ○○○정), 서귀포(P-○○○)
세부내역 부재(2척)	부안(P-○○○), 완도(○○○함)
장비나라 반납(1척)	목포(○○○정)
재고없음(3척)	완도(○○○함), 동해(방제○○호, ○○○정)

주: 세부내역 [별표 4] “운항정지함정 물품 처리 현황” 참조

자료: 각 해양경찰서 운항정지함정 물품처리현황 제출자료 재구성

※ 일선현장 의견 : 운항정지 함정의 처리와 관련 고가의 소모품에 대해 반납 필요성 공감, 장갑류 등 저가 및 재고수량이 불명확한 소모품의 경우 반납 실효성 의문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동산'】

부동산에 부착하거나 부동산의 종물*관계로 인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던 동산이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때부터 물품으로 관리

⇒ 조달청 「물품관리업무 매뉴얼」, “물품관리법 적용 제외 동산”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을 돕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킬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민법」 제100조

➤ (조치사항)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은 경비함정 운항정지에 따른 ‘물품분류심의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통일된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개선)